

노동자대투쟁 10주년과 ‘노사관계 개혁’

이 원 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앞으로 열 달 정도 지나면 87년 노동자대투쟁 10주년을 맞는다. 요즈음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말이 무색할 정도로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과연 어느 지점까지 와 있는 것일까? 노동운동은 87년 이후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시급히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이란 어차피 도약과 침체의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발전하는 것이므로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비판할 일은 아니며, 당면한 과제를 잘만 해결하면 또다시 도약할 수 있다는 장기적인 낙관론이 주조를 이루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인 것 같다. 이러한 낙관론의 밑바닥에는 지난 10년 가까운 기간에 숱한 어려움을 극복해 냈다는 자신감이 질게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노동운동을 둘러싼 상황은 87년 이전과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그 이후에 비해서도 크게 달라져 있다. 최근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노사관계 개혁'이나 노동법 개정 움직임도 이러한 상황변화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즉 노사관계 개혁은 87년 이후 크게 중대한 노동운동의 역량에 대응하기 위하여 총자본 측이 새로운 노동통제 책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른바 노사관계 개혁의 원점은 바로 87년 노동자대투쟁이라 할 수 있으며 그 핵심적 사안인 노동법 개정은 지난 10년간의 경과를 총결산하는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또한 그 결과는 새로운 상황에 대한 대응을 노동운동진영에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87년 대투쟁을 전후한 노동운동의 궤적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점검해보는 것도 결코 무익한 일은 아닐 것이다.

87년 노동자대투쟁의 운동사적 의의

해방 후 우리나라 노동운동에는 몇 차례 변화·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 1945년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의 출범, 1960년 4.19혁명후 노동운동의 폭발, 1970년 전태일열사의 분신사건, 1980년 봄의 투쟁, 그리고 87년 7·9월 노동자대투쟁 등이 그것이었다. 이를 역사적 사건들을 현상적으로 보면 87년 이전까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 번째는 정치적 변화를 들파구로 하여 운동이 폭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1945년 전평의 결성과 일련의 투쟁은 해방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전개되었으며 1960년 5월 이후 노동자들의 분노의 폭발도 4.19혁명의 성공을 계기로 한 것이었다. 또한 1980년 봄의 격렬한 투쟁은 유신독재정권의 붕괴가 그 들파구였다. 그 가운데 1970년 전태일열사의 분신은 정치적 변화를 직접적인 계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당시 박정희 정권의 정치적 위기가 크게 고조되었던 시기였다는 점에서 같은 범주로 볼 수 있다.

둘째는 노동자 투쟁이 매우 짧은 기간 지속되다가 곧바로 지배권력의

억압에 의해 좌절되고 말았다는 점이다. 전평은 설립 후 1년 만에 미군정의 탄압에 직면하여 격렬한 저항 끝에 3년 만에 소멸하였고, 4.19혁명 이후 폭발했던 노동자들의 울분은 불과 1년 1개월만에 군사쿠데타에 의해 억압되었다. 또한 70년대초 급증했던 노동쟁의는 곧 유신독재체제의 등장으로 진화되었고 80년 봄의 격렬했던 투쟁도 겨우 2개월 여만에 전두환 군사정권에 의해 단절되었다.

세 번째는 대대적인 노동자투쟁의 주기가 짧아져 왔다는 점이다. 1945년 전평출범으로부터 1960년 4.19혁명이후 까지는 15년이 걸렸던데 비해 1961-1970년 전태일열사의 분신까지는 10년, 1972-1980년까지는 8년, 1980년-1987년 까지는 7년이었다.

네 번째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그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각 단체의 투쟁들은 그 규모나 격렬성에 있어 공통적으로 폭발적인 양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낡은 모순을 제거하고 새로운 전망을 열 수 있는 조직과 이념을 창출해내지 못한 채, 지배권력에 의해 과거와 다름없는 억압적인 통제체계에 종속되고 말았다.

왜 이러한 특징을 지니게 되었는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운동을 주어진 제약조건의 극복과정이라고 한다면 그 가장 주된 원인은 노동운동 내부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즉, 노동자계급의 역량이 정치적 변화를 추동할 만큼 성장하지 못했던 것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분노를 조직화할 만한 역량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노동운동 폭발의 주기가 짧아져 왔다는 사실은 노동자의 양적 증가와 함께 노사간의 모순이 심화되어 왔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의식이 그에 상응하여 고양되어 온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고양된 의식을 조직으로 연결하여 총자본의 힘을 제어하거나, 최소한 맞서 대항할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함으로써 번번히 지배권력의 억압에 굴복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87년 노동자대투쟁은 이전의 투쟁과 어떤 점에서 다른 것일

까? 87년 노동자대투쟁은 6.29 선언이라는 정치적 변화를 계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 이전과 다를 바가 없다. 또한 투쟁기간이 매우 짧았다는 점도 유사하다. 투쟁의 주기를 앞당겼다는 점도 노동자들의 주체적인 사전준비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정치정세의 변화에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7년 대투쟁이 이전의 투쟁과 확연히 구분되는 것은 그 이전의 대투쟁에서 시도하지 못했던 새로운 운동의 지형을 구축했다는 사실이다. 노동자들은 생존에 필요한 경제적 성과를 쟁취해내는 한편 총자본의 폭력적인 탄압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기존의 운동방식을 거부하고 새로운 조직과 이념을 일구어 냈던 것이다.

이 새로운 운동이 이른바 ‘민주노조운동’이었고 민주노조진영이 8년여의 악전고투 끝에 쌓아올린 성과가 바로 민주노총이었다. 이렇게 보면 87년 이후 민주노총 출범까지의 과정은 자주성·민주성·연대성·투쟁성이라는 노동운동의 기본원칙을 확립함으로써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돋움하고자 했던 장구한 노동운동사의 경험을 체현한 것이라 할 수 있었다.

민주노조진영의 등장은 총자본만이 아니라 노동조합 내부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총자본은 종래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노동통제 전략을 견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대옹체를 마련하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또한 민주노조진영의 발전은 한국노총을 유일한 총본산으로 했던 노동조합 조직의 재편성을 불가피하게 했고 한국노총은 내부개혁을 추진하여 새로운 출발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와 함께 민주노조진영도 엄청난 조직적 훠손과 회생을 치러야 했으며 민주노총 결성 이후에도 이 어려운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민주노총은 반민주적 악법을 근거로 한 권력의 억압과 자본의 위협 속에서 모처럼 어렵게 만든 조직을 지켜내는데 모든 힘을 쏟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노사관계 개혁’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참여와 조직적 역량의 함수관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이하 노개위)에서의 노동법 개정논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결과로 보면 노개위 안팎에서의 총자본의 집중적인 공격 속에서도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핵심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측의 희망이나 의지가 전면 관철된 것 같지는 않다. 이를 둘러싸고 일부에서는 노개위 참여 자체가 잘못된 방침이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고, 이 논점은 민주노총이 노개위 불참을 선언하고 투쟁국면으로 전환하면서 힘을 얻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노개위 참여가 당초부터 잘못된 방침은 아니었다. 노사관계 개혁은 ‘당근과 채찍’이라는 개량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운동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개량투쟁의 대상이라는 성격도 아울러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노개위 참여는 개량투쟁의 한 방식일 수는 있어도 그 자체를 개량주의라고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정작 문제가 된 것은 노개위 참여가 아니라 참여 후에 노개위 안에서 나타난 자본측과 정부의 태도 변화였다. 자본측과 정부는 헌법상의 노동 기본권 보장과 국제노동기준을 완전히 무시하고 군사정권하에서 노동부 노동법연구위원회가 만든 안 보다 크게 뒤쳐진 수준에서 기존의 악법조항들을 존치시키려 들었다. 왜 이렇게 된 것인가? 노조측 대표들의 교섭 전술이 미숙해서일까? 그건 결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교섭대표의 전술은 노조 측의 목표와 기본방침 위에서 구사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전반적으로 강화된 정치적 보수화의 경향이나 심각해진 경기침체, 그리고 이를 빙자하여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정부와 자본측의 여론몰이가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간의 미묘한 이해관계를 이용하여 바티식 타결을 노린 정부 및 자본측의 계산도 가미되었을 것이다. 또한 ‘참여와 협력’을 지상과제로 내걸고 수려한 논리로 정부 자본측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는 학계의 동향도 힘을 실어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정부 및 자본측의 태도를 바꾸게 한 원인은 아닐 것이

다. 왜냐하면 이러한 요인이 작용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당사자인 노동조합 측을 무시하고는 이른바 '신노사관계 구상'의 명분은 깨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혹시 민주노총의 조직력이 취약해져 있으므로 자기들 목표대로 밀어붙이면 된다고 본 것은 아닐까? 그리고 민주노총의 대의명분을 회복시키기 위해 경제위기설과 노동자책임론과 같은 이데올로기 공세를 적극적으로 편 것은 아니었을까? 교섭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본다면 이것이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노개위 안에서의 노동법 개정 논의도 하나의 교섭이고, 교섭이란 조직적 힘에 의해서 결판이 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과연 민주노총의 조직력은 정부와 자본측이 알볼 수 없을 만큼 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

그간 조직력의 확대 강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어 왔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점이 남겨져 있다. 조직확대 문제는 조직률의 저하 경향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분명히 진전되고 있지 않지만 기존의 조직력상황은 어떤가? 임·단투 때의 쟁의참가율이나 교육 등 일상활동에 대한 조합원의 참여도는 87년 대투쟁 이후의 열기를 유지하고 있는가? 노동조합활동의 중핵을 이루는 간부들은 매우 혼신적이고 열성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신뢰나 운동의 발전을 의식하지 못한 채 피로에 지쳐감으로써 간부나 대의원 선출을 기피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조합운영이 조합원 대중보다는 간부중심으로 흐름으로써 조직력의 핵심고리라고 할 수 있는 조합원과 집행부간의 일체감이 현저히 약화해가고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생긴 조직력의 틈새 때문에 자본측으로부터 가해지는 신경영전략의 대공세 앞에 수세적인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면 금년 임·단투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는데도 조합원 인준투표에서 일어났던 부결바람을 일부사업장의 일시적인 현상으로만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조직력 강화에 대해 노동조합의 접근방식은 조직형태의 전환문제에서

도 드러나고 있다. 오늘날 운동의 발전을 저지하고 있는 가장 우선적인 요인으로 기업별노조체계를 꼽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산별노조 건설이 오래 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서 제기되었고 거의 대부분의 노동조합들이 선언과 강령에 산별노조 건설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별노조 건설과 관련한 실천은 극히 일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논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연맹단위의 극히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지역이나 현장단위에서는 조직형태 변화의 필요성이나 산별노조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

노동법 개정투쟁 - 조직력 확대 강화의 계기로

이제 노동법 개정과 관련한 상황은 노개위 안에서의 협상국면으로부터 노동조합의 투쟁국면으로 바뀌고 있다. 노동법 개정은 노개위의 결정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당초 일정대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아직 몇 가지 단계와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정작 승부는 지금부터인지도 모른다. 노동조합으로서는 당연히 정확한 정세판단과 치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일사불란한 조직적 대응체계와 다양한 전술이 마련되어야 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광범한 연대 틀과 선전활동이 조직되어야 할 것이다.

당연히 1차적인 목표는 노동법의 민주적 개정을 관철시키고 반노동자적 개악을 저지하는데 두어질 것이지만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 이유는 노동법 개정내용 만이 노동운동을 제약하는 결정적인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만일 노동법이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아닐 것이다. 또한 노동법 개정이 일부 개선, 일부 개악으로 결말이 나거나 최악의 경우 현행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운동이 끝장

나는 것도 아닐 것이다. 어떠한 경우든 주체적인 역량과 대응태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투쟁의 기본적인 목표는 조직력을 키우고 힘있게 하며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을 한층 더 높이는 데 두어져야 할 것이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정부가 내놓은 노사관계 개혁의 일정은 87년 노동자대투쟁 10주년이 되는 1997년을 완성의 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노동법 개정이 좌절되고 노동자들의 투쟁이 시작되면 정부와 자본측은 ‘노사관계 개혁’이 실패한 책임을 온통 노동조합에 덮어 씌워 노동조합을 분열시키고 고립시키려 할 수도 있다. 최근 더욱 경색된 정치적 분위기를 이용하여 대대적으로 공격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노동운동은 지금 보다 더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운동은 노동자들의 몫이지 권력과 자본의 선택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정세라는 것도 항상 변화하기 마련이다. 노동현장에는 아직도 87년 이후의 자부심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으며 간부들의 운동에 대한 전망과 발전을 향한 의지, 그리고 혁신적인 실천활동도 살아 움직이고 있다. 오늘의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진단과 정확한 목표설정, 통일적인 투쟁방안을 실천해 간다면 운동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장이 마련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 나라 노동운동사에 획기적인 전기를 이루었던 87년 대투쟁이 10년 후 오늘의 노동운동에 부과한 과제인지도 모른다.

KLSI